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384 |
|----------|------|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 의 자 : 박정훈 · 김선교 · 임종득
최은석 · 김정재 · 이성권
고동진 · 박충권 · 유용원
이양수 · 배현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국공유채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건축상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
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
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
한다.
2. “도시철도부지”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
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과 도시철도부
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
시철도 중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도시철도부지 및 도시철도 주변지역
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
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지하화통합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도시철도부지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 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효과적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도시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시행 예정 지역의 범위

5.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출

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제한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 ④ 도시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절차·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